도시숲·문화예술시설 탈바꿈…중앙근린공원 시민품으로

'녹조라떼 반복' 풍암호 6월 폐쇄 후 정비…배수로공사·문화시설 조성
근린공원 내 테마별 숲 20여곳 조성…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 가능성 높아

2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중앙근린공원 1지구에 있는 마을숲(1번)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현장은 7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새단장이 한창이다.

매년 녹조가 반복되는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는 오는 6월 폐쇄 후 수질개선 작업을 거쳐 2027년 시민을 맞이한다. 중앙근린 공원내 마을 숲공원은 올 말까지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 신청하는 등 도시 브랜드와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풍암호 녹조라떼 사라진다** = 광주시 서구 중앙근린공원의 한 가운데 위치한 풍암호수는 오는 6월 폐쇄된다.

21일 광주시와 (주)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에 따르면 오는 6월께 중앙근린공원 조성공사의 핵심 인프라인 풍암호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풍암호수를 가림막으로 차단하고 공사를 겨쳐 2027년 연말께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SPC는 봄철 시민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여름이 시작하는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풍암호수 주변에는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수변 문화예술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도 확충된다.

광주시는 공사 후 풍암호수에서는 녹조라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PC측은 공사 과정에서 풍암호수 내 담수를 전부 빼낼 예정이다. 이후 호수 바닥의 동·식물조사를 진행하고 배수로 공사를 진행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평균 깊이 2.8m의 풍암호수에 흙을 채워넣는 작업을 거쳐 평균깊이를 1.5m(50㎝~2m) 수준으로 맞춘다.

이후 물이 새지 않는 소재의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고 수돗물로 채울 예정이다. 현재 풍암호수(저장능력 46만t) 채워져 있는 34만 t의 담수가 비워지고 수돗물 16만 t을 채운다는 것이다. SPC측은 수심을 낮추고 매해 수돗물 8만 t을 추가로 채워 넣으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숲** = 중앙근린공원 내 조성 중인 공원의 밤산책길에서 맹꽁이 합창을 들을 수 있다.

광주시와 SPC측에 따르면 중앙근린공원내 조성 중인 11개 마을숲은 올해 연말까지 조성을 마치고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공사 중인 11개의 마을숲 중 2개의 마을숲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서식지도 보존된다. 잘 보전된 생태계를 가진 공원은 인간에게 유형적 생산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대기 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 환경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생태공원은 장소 그 자체로 쾌적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재충전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각 마을숲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주말 농장이 들어선다. 마을 숲의 하나인 어울림숲에 조성되면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의숲, 치유의숲, 우듬지숲,가족의 숲,활력의 숲, 장미원 등 다채로운 테마를 가진 도시숲도 조성된다.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 청신호** =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중순께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300만㎡→100만㎡)를 골자로 한 개정 법률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돼 시행중이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은 없는 상황이다.

공원녹지법상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300만㎡ 이상), 소유권(부지 전체가 지자체 소유), 전담조직(8명 이상), 관리·운영조례, 공원시설(도로·광장·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관리시설 등) 등을 충족해야한다.

중앙근린공원의 면적은 279만 6446㎡로 부지면적이 조금 미달되지만, 모든 부지가 지자체 소유라는 점에서 선정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중앙공원내 2027년 입주 예정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광주 중앙근린공원(1·2지구 280여만㎡, 비공원부지 제외)은 도시공원 일몰제(20년간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취소되는 제도)에 따라 2020년 7월 공원구역이 해제돼 민간공원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아시아 5개국 20여 지방정부와 교류 강화

교류회의서 국제행사 등 홍보

전남도가 21일 "'제2회 전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를 열고 아시아 5개국 20여 지방정부와 교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호지역 교류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와 소통, 협력해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고,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아시아 5개국 20개 지방정부에서 40여명의 국제교류 담당자가 참가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전남의 국제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향후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중점 홍보했다.

또 참가자들이 전남의 매력적인 문화·관광 및 투자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도록 전남도농업박물관, 영암 구림 전통마을, 한국천연염색박물관, 한국전력공사 본사 등 홍보·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순한 지역 홍보를 넘어, 글로컬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국제사회와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전통적 교류지역 외에도, 아시아 신흥 성장국과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교류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I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들 광주에 둥지

광주시, 5개 기업과 협약체결

글로벌 AI중심도시 조성에 나선 광주시에 AI반도체 설계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팹리스(AI반도체 설계업체) 기업 ㈜디노티시아, ㈜아이닉스, ㈜쿠오핀과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인 ㈜케이티엔에프, ㈜명인이노 등 5개 기업과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275~279번째)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업체 대표들을 비롯해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기업은 지역기업들과 협력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광주시는 인공지능 인프라 지원, 전문 인재 양성, 관련 기관·기업 연계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협약한 팹리스 기업은 각각 거대언어모델(LLM), 영상신호처리(ISP), 영상전송, 원격관제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등 광주시 주요 산업과 융합해 기술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보기술(IT) 인프라기업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제품 실증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지원군 역할을 한다.

지역 내 인공지능 전용 서버의 공급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서비스 구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으로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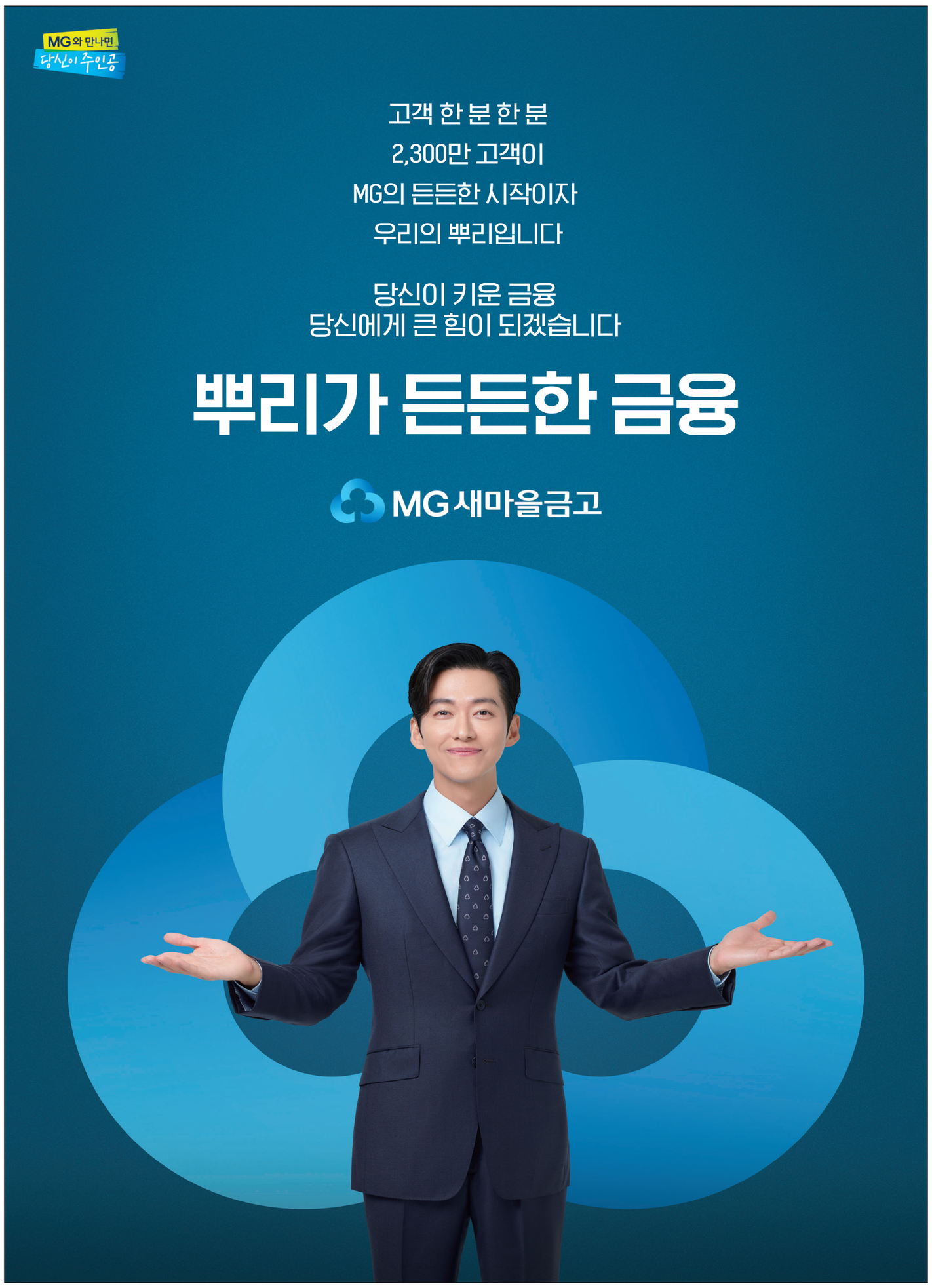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의결

광주시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광주광역시 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제5기 위원은 광주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실·국장과 제4기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1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신임 위원장에는 이승윤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현남 위원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7년 4월17일까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에 기반한 청년정책 심의기구로 지난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사업' 지원대상자를 지난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광주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이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